

두 친구의 님은꼴 노무현, “좌파 신자유주의” 문재인, “난 친노동이자 친기업”



1기 내각이
보여 주는
문재인 개혁의 미래

3면

‘가짜뉴스’는
무엇이며,
왜 퍼질까?

4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총선 이후
영국 노동당과 코빈

5면

동성애 차별 조항
군형법 92조6
폐지하라

2면

한국
성소수자 운동은
어디로?

6~7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동아시아 정세

온라인

그렇듯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8면

군형법 92조의6 폐지 집중행동 기간이 시작되다

이지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5월 24일 육군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 많은 성소수자에게 충격을 안겼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오늘 내 사랑은 범죄가 됐다”며 울부짖었다. 군형법 92조의6은 A대위 같은 군대 내 성소수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런 성소수자 군인의 처벌을 중단하고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 행동이 시작된다.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폐지할 때!”가 진행된다. 이 공동행동을 위한 6월 14일자 회의에는 필자가 속한 노동자연대를 포함해 시민·사회·좌파·노동 단체들 15곳이 참가했다. 이 단체들은 7월 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7월 8일 민중대회 공동 홍보전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군형법 92조의6 폐지 법안은 5월 25일 발의됐다. 군형법 92조의6은 성추행 여부와 무관하게 동성 간의 성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관련 기사: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군형법 92조의6을 근거로 육군 내에서 동성애자 색출과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군부 내의 야만적 마녀사냥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의당 의원 전원, 무소속 윤종

오·김종훈 의원(둘 다 울산, 민주당 의원 2명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그런데 발의를 준비하던 석 달 동안 발의의 최소 요건인 의원 10명을 모으는 일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민사회진영 출신인 박주민·남인순 의원이 불참한 것은 크게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박주민 의원은 “시·구의원님들 및 당원분들과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뒤늦게 동참했다.)

야만적인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여전히 수사 받고 있는 군인들이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군인도 1명 있다. ‘기소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군인들 역시 모두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이 선거 기간에 “[군 내] 합정수사가 근절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처럼 성소수자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동성애자 군인 색출·처벌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한편, 폐지 법안이 발의되자 일부 기독교 우익의 훼방도 시작됐다. 특히 윤종오·김종훈 두 진보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지역에서는 악의적 선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당신의 자녀가 항문성교와 성추행을 당해도 관찮으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군대 성폭행에서 지켜주세요”라며 공공연하게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이들은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의원실 앞 1인 시위를 벌였다. 두 의원에게 항의 문자와 전화도



쇄도했다고 한다.

이들은 심상정 의원이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울산북구청에서 열린 심상정 의원 초청 강연장 앞에서 1백50여 명 규모의 항의 집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이런 일부 우익들의 훼방이 대세는 아니다. 군인권센터가 받은 A대위 무죄 석방 탄원에는 5일만에 4만 명 넘게 동참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A대위 선고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를 모아서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명백한 동성애 차별법인 군형법 92조의6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 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행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통신비 인하 공약에서 후퇴하자, SK텔레콤 같은 이동통신사들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선택약정할인을 상향 조정이 법률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라며 이마저도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은 필수재다. 2017년 2월 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는 우리나라 총인구보다 많은 6천75만 명이고 휴대폰 보유율은 96.6퍼센트다(이 중 스마트폰 가입자는 4천6백85만 명, 83.3퍼센트). 전 국민이 휴대폰 한 대 이상은 갖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부담 없는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대 한국 정부는 통신 서비스를 민영화함으로써(1994년 SK텔레콤, 2002년 KT) 대기업들의 배만 불렀다.

대형 통신3사는 기본요금 1만 1천 원을 폐지하면 연간 손실이 7조 원이 넘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자신들의 영업이익이 3조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3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쓰는 마케팅 비용만 연간 8조 원에 이른다(그런데도 시장 점유율은 거의 변동이 없다). 이들 회사 간 통신망 중복투자비 역시 연 2조 원에 이른다. 또, 매년 1조 원 가까운 돈을 배당으로 써 버리고 있다.

정부는 통신을 민영화하면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쓸데없는 이윤 경쟁으로 기업주들과 대주주들만 득을 보고 있다.

KT·SKT 같은 독과점 대기업들을 다시 국유화해, 정부가 저렴하고 질 좋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통신비 인하도 가능할 것이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한미 정상회담의 대북제재 강화 합의에 대한 북한식 대응
- ★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에게 환대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미 외교
- ★ 미·중 갈등, 다시 악화되다
- ★ 시국 선언은 교사의 양심이자 표현의 자유다 세월호 시국 선언 교사 징계 말라
- ★ 화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하라
- ★ 이화여대 “촛불과 학생들의 지지로 당선된 김해숙 총장은 학내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마르크스21 21호(근간)

노동당 “노동” 당명 폐기와 혁신 논쟁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된 대응

노동당이 8월 당대회를 앞두고 전면 혁신을 추진 중이다. 당명, 강령, 조직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자는 것이다. “노동”을 당명으로 쓰지 말자는 주장부터 찬반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적 전략의 관점에서 노동당 혁신 방향의 성격과 문제점을 두루 살펴 보며 지금 시기에 좌파가 취해야 할 관점과 전략을 주장한다.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독과점 통신기업들을 재국유화하라

강동훈

문재인 정부의 ‘핸드폰 기본요금 1만 1천 원 폐지’ 공약이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들의 반발로 흐지부지 끝나게 생겼다.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통신요금 인하는 법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유영민)며 물러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가계통신비 20퍼센트 인하를, 박근혜 정부도 반값 통신비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별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기본요금 1만 1천 원 폐지’에 한참 못 미치는 선택약정할인을 상향(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2만 원대 ‘보편요금제’ 출시 등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처럼 정부가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1기 문재인 내각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팀을 재소집하다

김문성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 인사가 일차 마무리됐다. 일부 장관직은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말이다.

박근혜가 내놓는 인물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국회 과반 다수당 정권이었는데도 한 달 넘게까지 내각의 절반을 겨우 채운 것과 비교된다. 합쳐서 의석이 과반인 야 3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결사 반대” 목소리를 높여도 문제가 된 장관들이 대부분 임명되고 있다.

이 차이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지지를 때문에 생긴 것이다. 대중은 자신들이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킨 결과로 새 정부가 등장했다고 본다. 그래서 적어도 옛 여권에 의해 새 정부의 발목이 잡히는 것은 보고 싶지 않은 듯하다.

이는 거꾸로 대중이 이 정부에게 바라는 바가 실제로는 적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불평등 해소,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복지 확대, 박근혜·이명박 일당의 적폐(세력과 정책 모두를) 청산하기 등등.

그러나 취임 두 달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인 행보와 인사는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다. 단지 느리고 불충분한 것만이 아니라 대중의 개혁 염원과 방향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가령 신임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외무고시 출신 외교 관료와는 다른 비주류 경력과 스타일, 그리고 성공한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첫 대외 임무였던 한미 정상회담은 남한이 미국의 패권정책에 충실한 동맹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이다. 강경화의 장관 취임 후 첫 행보와 문재인의 워싱턴 발언은, 대선 기간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관해 말한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이 아닌 한국 민중을 상대로 한 것이었음만을 드러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는 “2007년 제주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총 책임자였다.”(2011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송영무 본인의 글) 송영무가 내세우고 있는 국방 개혁은 군비 확충을 목표로 한 것인데, 그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방위산업체



문재인 정부 '개혁'은 노동자 대중이 바라는 개혁과 다르다

(군수업체)의 수출 브로커 구실을 했다.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나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현백 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 전 대표 정도가 개혁적 인사로 볼 수 있을 텐데, 문재인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전체를 보면 이런 개혁 인사 등용은 거의 ‘끼워 팔기’ 수준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이나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폐 등에서 이전의 진보적 의견을 고수하지 않고 우파에 타협해 후퇴하는 답변을 했다는 점이다.

정책 노선으로 보자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주요 직책에 우파가 특별히 반대할 만한 인사는 없다.

학자 출신들의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김상곤, 정현백을 제외하면 진보 성향 인물은 없다. 되레 안정환처럼 이름값은 있으나 전혀 진보성이 없는 인물들이 인사 참사를 일으키면서 중도 사퇴했다.

교수 출신인 장하성, 김상조도 진보로 분류할 수는 없다. 게다가 노무현 때처럼 내각의 관료 출신 장관들과 학자 출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 갈등이 반복될까 봐, 장하성과 김상조는 경제부총리 김동연을 찾아가 ‘경제 컨트롤 타워’는 김동연이라고 관계를 정리했다.

지금 문재인 인사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노무현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 등 이미 유사한 지향을 확인한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라는 게 보수적인 정부 관료들이 수용할 만한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다.**

특히,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며 각 분야의 시장화와 노동 유연화를 촉진하고,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근로 연계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근로 연계 복지는 노동에 종사해야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유럽의 복지국가가 후퇴하면서 나타난 정책 기조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결코 친노동이 아니었다.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은 갑을오토텍이 노조 파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정에 섰을 때 사측을 변호했던 인물을 돌이나 요직에 등용했다. 한 명은 정권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공안검사 출신 박형철이고, 다른 한 명은 최근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신현수다. 신현수는 악명 높은 김앤장을 거쳤고, 갑을 사측의 증거 인멸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은수미 전 의원 등 다른 친노동적 인물도 발탁했다고 반론할지 모르지만, 진짜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누구를 발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노조 파괴 공작을 변호하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검찰 개혁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표방해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자살로 이어진 검찰의 모욕적 수사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당시 노무현의 검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이기도 했다.

그래서 문재인의 검찰 개혁론은 정권 초 “평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던 노무현과는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 노무현은 검찰 중립화(정치검찰 근절)를 매우 강조했다. 언행 일치를 위해 검찰 인사에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다만, 법무부 자체가 검찰로 채워진 것이 검찰의 중립화에 방해된다며 판사 출신인 강금실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함께 추진하려 한 것이다.(뒤에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해 검찰총장과 충돌한 법무부장관 천정배도 검사가 아니라 판사 출신이었다.) 결국 이런 식의 개혁이 완전히 실패했음은 노무현에 대한 이명박 검찰의 수사에서 확인된 것이며, 그 절정은 박근혜 게이트의 배후에서 행해진 우병우 등의 검찰 농단이라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의 검찰 개혁은 검찰 권력을 분산·약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다. 노무현이 직면했던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노무현은 검찰 중립화를 앞세우다가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에 개입할 수단을 스스로 제한해 버렸다. 그래서 (형식적) 중립화뿐 아니라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용어들이 새로 도입됐다.

검찰은 국가의 대표적 억압 기관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이 나라의 상층부터 하층까지 다 뒤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검찰 권력의 약화가 노동계급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까? 그러나 문재인의 검찰 권력 약화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 현재까지 강조되는 문재인 검찰 개혁의 방향은 두 가지인 듯하다. 첫째, 검찰의 수사권(정확하게는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분산시켜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둘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또 다른 억압 기관인 경찰에 독자 수사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경찰은 한국 역사에서 검찰 못지 않게 독재의 앞잡이이자 핵심 폭력 기관이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때 경찰의 악랄한 인권 침해와 집회·시위 탄압을 겪은 촛불 대중이 문재인의 검·경 수사권 이원화 방안을 그다지



열의있게 지지하지 않는 이유다. 혹시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수처는 누가 통제하고 견제하는가? 공수처·경찰·검찰이 서로 견제한다면, 이 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결국 검찰 권력의 분산이라는 것은 지배계급의 상이한 부분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권력 분산이고, “민주적 통제”는 선출과 소환, 보고 책임 등이 보장되는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통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문재인의 검찰 개혁은 별볼일 없을 것이다. 사실 검찰을 부패 없고 민주적 기관으로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공상이다. 검사장 직선제(일각에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잘 거론되지 않는)를 상상해 보면 된다.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기관의 문민 통제 수단으로 제안되지만, 금태섭 등 검사 출신 정치인들은 오히려 검찰 권력을 강화한다며 반대한다. 반대의 취지는 검찰의 선출직화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거를 해도 검사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인사 풀은 한정돼 있을 것이고, 대중이 쉽게 그의 수사 실력이나 청렴도를 검증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검찰의 권력은 선출과 비선출 여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검찰 외부의 세력, 특히 체제 반대 세력을 범법자화 할 수 있는 힘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방검사(D.A.)도 선출되지만, 특별히 노동자 계급이나 차별받는 유색인종, 진보·좌파 인사 등에게 공정하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 아래서 검찰을 민중적 통제(민주주의) 아래 둔다는 건 공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의 검찰 개혁은 애초에 그런 공상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다. 단지 옛 여권에 치우친 검찰 내 세력관계를 바꾸는 보잘것없는 것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규모와 기세가 검찰이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도록 만들었듯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진짜 필요한 일이다.

국민의당의 정치적 파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간부가 증거를 조작해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제보 조작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유미라는 개인이 국민의당 전체를 속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믿기는 매우 어렵다. 이유미가 안철수의 제자인 점, 이유미와 안철수를 잇는 고리인 이준서를 안철수가 영입했다는 점, 안철수가 일주일이나 침묵하다가 간접적으로 해명한 점 등이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폭락했다. 다른

곳도 아닌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를 거의 석권하면서 제3당 지위를 거머쥔 국민의당이 사실상 붕괴한 것이다.

국민의당의 위기에는 더 본질적인 정치적 배경이 있다. 첫째, 이 당의 태생적 구조 문제다.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간 호남 의원들 다수는 문재인이 장악한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 받기 어려웠다. 그래서 민주당을 나가 안철수 중심으로 뭉쳐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대선에서도 무리수를 던진 것이다. 증거 조작에 관해

국민의당이 한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 용주, 김인원 등 검사 출신자들조차 허위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민의당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국민”이라는 식으로 민주당 오른쪽에서 그리고 새누리당 왼쪽에서 당을 자리잡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의당이 자리잡으려던 정치적 지반 자체가 매우 협소해져 버렸다. 게다가 이 협소한 지반 위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른정당이 경쟁자로 들어오면서 어려움은 더 커졌다.

‘가짜뉴스’는 무엇이며, 왜 퍼질까?

장호중

문재인은 트럼프를 만나 자기도 대선에서 ‘가짜뉴스’ 때문에 고생했다며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 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모조리 가짜뉴스 취급하는 트럼프를 편든 것이다. 의도가 무엇이 있든 이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을 모욕한 셈이다.

오늘날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 위기와 정치적 양극화, 주류 언론의 영향력 쇠퇴 등이 가짜뉴스가 늘어난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누구나 쉽게 매체를 만들어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인터넷이 오늘날 가짜뉴스의 핵심 수단이 됐다.

유명한 통계 조사 기관 퓨리서치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페이스북으로 뉴스를 접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는 미국 대선 기간 3개월 동안 페이스북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가짜뉴스 20개를 조사했다. 공유, 좋아요, 댓글 등 반응이 무려 8백71만여 건으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류 매체의 ‘진짜’ 뉴스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 심지어 그중에는 멀리 마케도니아의 한 마을 청소년들이 광고 수입을 노리고 만들어 낸 가짜뉴스들도 있었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모두 트럼프에게 불리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 유력 언론은 가짜뉴스를 트럼프 당선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세계 유수의 기업인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터넷에서 ‘힐러리가 아이시스(ISIS)에 무기를 팔았다’거나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등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것을 개탄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비난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겨냥했다. 대선 당시 미국 지배자들 일부는 어디로 뭘 지 알 수 없는 트럼프보다는 힐러리가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여겨 트럼프에게 비판적이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런 비판의 영향력을 깎아내릴 요량으로 싸잡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사실 이처럼, 서로 경쟁하는 지배계급 파벌들이 언론을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 자체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각종 흑색선전과 비방, ‘아님 말고’ 식 추측 보도, 왜곡 보도 등 여기에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국민의당의 문재인 아들 정보 조작 사건이나, 강남구청장 신연희의 가짜뉴스 유포 등도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흑색선전의 사례다. “한국은 세금을 국가정보원이 아당 후보 비난 여론을 조작하고, 청와대 뉴미디어실이 극우·혐오 사이트의 글을 퍼 나르는 곳이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대선이 있던 2012년 정부 당국 요청에 따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할 수 있는 회사 자원의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미디어오늘) 2017년 1월 13일지)



자아 중심적인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확증편향’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가짜뉴스가 더 잘 확산된다

서로 경쟁하는 지배계급 파벌들이 언론을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 자체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각종 흑색선전과 비방, ‘아님 말고’ 식 추측 보도, 왜곡 보도 등 여기에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지배계급 분파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지배자들과 주류 언론이 노동자와 차별받는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을 왜곡하고 매도하는 일도 비밀비재하다.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 가짜뉴스 운운하는 동안, 민주당의 전 부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청와대 앞길에 천막을 쳤다는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퍼나르며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

인터넷 매체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문제도 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용이 적게 들고, 무제한 복제될 수 있고, 한번 널리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찬사를 보냈다. 차별받는 사람들이나 미조직 노동자일 부분은 운동을 건설하지 않고도 이런 특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정을 보면, 온라인 매체의 특성은 피지배자들에게만 유리한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배자들도 인터넷 매체를 자신의 목적에 따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으로 말해, 언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듯이 인터넷 가짜뉴스의 영향력도 과장해서

는 안 된다. 특히, 소수 엘리트들이 대중의 의식을 조종한다는 음모론은 현실과 다르다. 지배자들은 인터넷 등장 전에도 학교 교육과 다양한 매체(TV, 라디오, 종이신문 등)를 이용해 피지배자들의 의식에 영향을 끼치려 애썼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언론에 대한 박근혜의 강한 편여과 온갖 가짜뉴스도 광범한 대중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 나서 성공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또, 자본주의는 서로 경쟁하는 자본들로 나뉘어 있고, 이들 각자와 연결된 다른 지배자들도 서로 경쟁을 벌인다. 그러다 보니 언론이 이런 분열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 위기는 언론의 폭로와 연관돼 있다. 대기업과 주류 언론이 만든 jtbc가 박근혜 퇴진에서 한 구실도 이를 잘 보여 준다.

언론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이와 관계 있다. 대중의 신뢰를 얻으려면 언론은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적어도 황당한 거짓을 꾸며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한마디로 말해 이런 규칙을 무시하는 선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앞서 언급한 인터넷 매체의 특징 덕분에 다른 수단을 이용한 가짜뉴스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간단한 기술만 익히면 주요 언론사 웹사이트를 모방한 뉴스 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단기간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를 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주자 두 명이 운영하는 가짜뉴스 〈리버티라이터스뉴스〉는 매일 최대 4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 조회수가 늘어나다 보니 대기업들도 이 사이트에 광고를 낸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가짜뉴스도 대개 시간이 흐르면 검증 과정을 거쳐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 그럼에도 적지 않

은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가짜뉴스를 믿고 심지어 갈수록 가짜뉴스에 의존하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자아 중심적인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확증편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해서 가짜뉴스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많다.”(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신문과 방송〉2017년 4월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생산물과 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림으로써 스스로 사회를 운영할 자신감도 잃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소외’라고 불렀다. 이런 자신감 상실은 노동계급이 총체적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데에 주된 어려움을 안겨 준다. 자신감과 총체적 세계관이 결여되면 수동성과 온갖 편견이 자리잡기 쉽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의식은 불균형하고 모순돼 있다. 일부는 음모론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확증편향 같은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지기도 한다.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소비되는 이유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며 스스로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소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운영할 자신감과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그 역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의 인터넷 규제를 강화해 가짜뉴스를 줄이려는 시도는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나 시장 질서에 비판적인 언론들에 재갈을 물리는 부메랑이 되기 십상이다.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주류 언론의 ‘진짜’ 뉴스가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악영향도 극복하려면,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서면서 정치적 경향과 각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투쟁 속에서 유통되고,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세계를 분석하고, 체제 변혁적 전망을 제시하는 사회주의 신문이 이런 인식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운동 내 인터넷 오용과 가짜뉴스

한편,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터넷 활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진보 언론도 많이 생겼다. 〈매일노동뉴스〉, 〈레디앙〉, 〈민중의 소리〉, 〈참세상〉, 〈노동자 연대〉 등은 주류 언론들이 외면하는 투쟁 소식을 전달하고 피억압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애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은 이런 기사를 널리 퍼뜨리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노동자 연대〉는 더 나아가 반자본주의적 전망과 분석, 사회주의적 전략과 전술 등을 제시하려 한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가짜뉴스 같은 인터넷 악용 사례가 노동운동 내에도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상업적 목적으로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려 그 평판을 깎아내리고자 할 때 ‘비용이 적게 들고, 무제한 복제될 수 있고, 한번 널리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온라인 매체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가짜뉴스를 처럼 세련된 형식을 갖추지는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페이스북처럼 공개된 온라인 매체에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가십과 비방을 퍼뜨려 평판을 깎아내리는 일이 대표적이다.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을 주거나 따돌리기, 자멸발단적 정점을 제기해 진정한 정점 흐리기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처럼 운동 내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그 대상 개인이나 단체가 부르주아적 가치를 갖도록 한 도덕적 비난이나 마녀사냥식 따돌리기에 시달릴 것을 염두에 두고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그런 짓을 벌인다는 점에서 사악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대의를 훼손하고 부르주아적 편견을 부추겨 노동자들의 단결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문제를 대수롭

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모욕 주기나 낙인찍기 등의 효과를 과소평가하거나, ‘집단지성’이 결국 오류를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첫째, 인터넷에서 비방을 통해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 준다. 오죽하면 이 때문에 각종 소송이 빈발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길까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상의 ‘집단지성’은 대개 잘 작동하지 않는다. “영국의 유력지 가디언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생산·유통한 우익 사이트들은 구글 페이지랭크 시스템에서 자신들의 검색 순위를 높여 줄 일종의 속임수를 찾아 공략했다. 그 결과 ... 구글에서 ‘유대인’(are jews)을 검색했을 때 최상위에 소개되는 글의 제목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10가지 이유다.’ 여성은(are women)을 입력하면 ‘여성은 사악한가’라는 자동 완성 문장이 등장한다. ‘히틀러는 나쁜사람이었나?’(Was Hitler bad?)라고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선 ‘히틀러가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었던 10가지 이유’가 뜬다.”(〈미디어오늘〉2017년 1월 13일지)

노동자 운동의 단결과 전진을 위해 애쓰는 좌파라면 이런 운동 내 이데올로기적 혼란에 진지하고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추천 도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연합 옹호가 아니라 반(反)긴축 투쟁이 좌파의 과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총무위원장이다.

6·8 총선 이후 노동당 의원들은 6월 마지막 주 의회에 입성하면서 [당대표] 제레미 코빈 찬가(讚歌)를 불렀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그중 일부는 어느 때처럼 다시금 코빈의 뒤통수를 쳤다.

6월 29일 노동당 의원 50명은 당론(기권)을 거슬러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국민당 의원들과 함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국정연설문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수정안은 [노동당 우파인] 추가 우무나가 주도했다. 우무나는 블레이크(侯)의 핵심 인물로 2년 전 코빈이 승리한 당 대표 선거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겁을 집어먹고 사흘 만에 접은 바 있다.

이 노동당 내 반대파들은 브렉시트를 뒤집을 수 있다고 꿈꾸는 자유주의 좌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보수당 총리] 테리사 메이와 조지 존슨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이들의 믿음은 더 확고해졌다. 유럽의 여러 지배자들이 예컨대, 유럽의회 의장 도날드 투스크—도 비슷한 회합을 내비친 바 있다.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는 많은 합정 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노동당 내 반대파 일당의 시도는 세 가지 점에서 완전히 잘못됐다.

첫째, 기본적으로 유럽단일시장은 상호 무역을 도와 경제를 살리는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다.

1980년대 중반 유럽단일시장이 처음 제안될 때 보수당 총리 마거릿 대처와 당시 유럽위원회 의장 자크 드로로 두 사람이 핵심적 구실을 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대처는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1980년대 신자유주의 반혁명적 핵심 설계자다. 드로르는 1980년대의 전반기 동안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프랑스판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다.

유럽단일시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유럽 자본주의를 자유시장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작동했다(좌파 학자) 불포장 스트리크의 표현). 민영화, 규



노동당 우파의 입력에 굴복하지 않은 코빈에 대한 지지는 계속 늘고 있다

제완화 정책을 촉진하고, 공공 소유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구실을 해 왔다. 이 점을 보면 긴축 정책을 뒤집고 보수당이 민영화한 산업 일부를 공공부문으로 되돌리려는 코빈이나 그의 예비내각 재무장관 존 맥도널이 영국의 유럽단일시장 잔류에 그다지 열의가 없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합정

유럽단일시장에서 그나마 사들 만한 점은 가입 조건인 “4가지 자유” 중 하나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블레이크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우무나도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기 위해서라면 유럽단일시장을 기꺼이 떠날 수 있다고 말한 전적이 있다.

수정안이 잘못될 둘째 이유는 그것이 총선 결과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해석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메이는 6·8 총선을 브렉시트 신임 투표로 포장했는데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에 찬성한 노동당과 영국독립당 지지자들의 표를 노린 것이었다.

그러나 메이가 파놓은 함정에 코빈이 빠지지 않으면서 이런 전술은 실패했다. 코빈은 완고한 노동당 잔류파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고 6·8 총선을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으로 치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우익과 손 잡지도 않았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브렉시트 논쟁에서 코빈이 “구경꾼” 노릇을 한다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코빈은 유권자들이 평론가

보다 낫다는 것을 간파했다. 브렉시트 정점에 집중하길 거부함으로써 코빈은 유럽연합 잔류에 더 많이 투표한 노동당 ‘뒤통’ 지지들과, 유럽연합 탈퇴에 더 많이 투표한 잉글랜드 북부와 웨일즈의 노동당 투표자 모두에게 반감을 사지 않을 수 있었다. [브렉시트 논쟁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 덕분에 노동당은 긴축 정책에 반대하고 경제적·사회적 개혁 공약(인기가 높다)을 선전하는 캠페인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여기서 바로 노동당 반대파들이 잘못된 셋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총선 이후 보수당은 혼란에 빠졌다. 보수당은 브렉시트 문제뿐 아니라, 긴축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서로 분열했다. 일주일 동안 [재무장관] 필립 해먼드, [브렉시트 장관] 데이비드 데이비스, [환경부 장관] 마이클 고브,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 등 현 내각의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긴축에 반대했다. 노동당 내 반대파들은 이와중에 [보수당이 아니라] 노동당 내 분열로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보수당에 살 길을 열어 줬다.

좌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옹호해선 안 될 신자유주의 기구 유럽연합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좌파는 보수당의 긴축에 맞서 투쟁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거리에서 더 많은 대중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수당까지 포괄해서 의회 계획을 꾸미려는 배신적인 친(親)블레이크 계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561호 / 번역 최병현

★ 나홀간의 토론의 장 ★ 차별과 불평등, 착취에 반대하는 토론
★ 청중 발언 시간 보장 ★ 노동자·청년·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론

주목할 만한 패럴 토론

★ 현 시기 노동운동과 좌파의 과제 — 문재인 노동정책, 민주조운동 진단, 노동자 계급의 연대 방안
★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
★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보·좌파
★ 세월호 참사가 보여 준 한국 사회 현실과 교훈

※ 이밖에도, 여성 차별과 해방을 위한 투쟁, 노동운동, 제국주의, 한국 정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한국사, 러시아혁명 100주년, 혁명가들 시리즈, 마르크스주의 방법, 운동의 전략·전술 논의, 환경/보건/과학, 학생·교육, 국제 등을 주제로 60여 개 워크숍이 열립니다. 웹사이트에서 전체 주제와 연사를 확인하세요.

17년 전통의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7

7.20(목) - 23(일) | 장소: 고려대학교 | 주최: 노동자연대

지금 참가신청 하세요

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facebook.com/marxism.or.kr

※ 웹사이트에서 참가와 참가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무지개행동과 한국 성소수자 운동 주류의 우경화

대안적 정치와 전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진희

최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노동자연대에 가입 신청 거부 결정을 통보했다. 노동자연대는 올해 3월 1일 주요 성소수자 운동 단체들이 모여 있는 연대체인 무지개행동에 가입해 활동하는 도중에 어이 없게도 강제로 쫓겨났다. 이 과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겼지만 이후 노동자연대는 또다시 가입 신청을 했는데, 무지개행동은 또다시 노동자연대 가입 거부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노동자연대는 한국에서 성소수자 운동이 태동하기도 전인 1990년대 초부터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며 해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저서를 번역 출판하는 등 동성애자 해방 사상을 확산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1997년 1월 민주노총의 파업에 고무받은 성소수자 청년들 일부와 급진적인 동성애자 운동을 새롭게 건설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노동자연대는 최근에도 A대위 구속에 항의하는 운동에 동참해 집회 참가, 재판 방청 등을 하며 관련 기사들을 신문에 실었고, 대학에서 벌어지는 성소수자 혐오 세력에 반대하는 여러 활동에도 연대해 왔다.

무지개행동은 지난해 총회에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기 위해 더 넓은 연대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무지개행동은 수십 년 동안 성소수자 해방을 위해 분석을 내놓고 여러 실천을 해 온 노동자연대의 참여를 환영하기는커녕 합당한 근거도 없이 쫓아냈다. 최근 보낸 공문에서 무지개행동은 “노동자연대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투쟁한 운동의 역사를 기억”한다면서도 노동자연대 가입 거부 결정의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무지개행동이 3월 초에 이미 가입해 활동 중인 노동자연대를 쫓아내는 무리수를 둔 까닭을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3월 21일 인권재단 사람 보도자료는 무지개행동이 올해부터 다국적기업 구글에게서 5천7백만 원을 후원받기로 했음을 밝혔다. 무지개행동이 이 사실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았기에 노동자연대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다.1 구글은 인권재단사람(소장 박래균)을 통해 올해부터 무지개행동과 무지개행동 소속 7개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지개행동의 집행위원은 이 구글의 돈으로 전국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연대의 추방을 주도한 무지개행동의 주도 단체들과 개인들은 노동자연대가 무지개행동에 남아 있다면 구글의 후원에 반대할 것임을 직감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노동자연대가 성소수자 운동의 우경적 전략, 즉 제국주의 대사관이나 대기업 등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자들과 동맹하려는 전략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음을 잘 안다.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서 보듯, 미국 등 서구 제국주의 국가 대사



“무지개로 무기 거래를 가릴 수 없다” 2017년 6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대기업과 군대, 경찰의 후원을 받은 자금심 행진 주최 측에 항의하는 성소수자들의 행진

관들과 다국적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2014년 이후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주요 전략이 됐다.

결국 무지개행동의 주도 세력들은 노동자연대가 성소수자 운동 내에 존재하는 친기업적·친제국주의적 정치에 도전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노동자연대를 배척한 것이다.

무지개행동과 성소수자 운동의 우경화

무지개행동은 2007년 10월 31일 노동연 정부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삭제한 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데 반대해 성소수자 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이 벌인 긴급 공동행동에서 시작됐다. 출범 당시 16개 단체였으나 최근 몇 년 새 가입 단체가 늘어나 현재 28개 단체가 됐다.

지난 10년 동안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끌며 한국 성소수자 운동에 기여해 왔지만, 그 정치는 갈수록 의회나 국제기구 등에 로비를 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법과 제도 개선에 몰두하는 개혁주의가 됐다.

2008년부터 무지개행동은 유엔의

국제인권조약을 활용해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의6 폐지 등을 압박하려 해 왔다. 올해도 “한국 정부가 비준·가입한 여러 국제인권규약의 메커니즘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면 활용할 수 있다”며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무지개행동을 친중간계급적 개혁주의자들이 주도하면서 성소수자 운동은 갈수록 온건해졌고 모순도 생겨났다. 무지개행동은 올해 문재인 정부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무지개행동 주도 단체·개인들 사이에는 사드 배치의 주범인 미국 제국주의자들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무시 못할 정도로 득세해 있다.

특히 무지개행동을 지배하는 정체성 정치(교차성) 같은 새로운 버전까지 포함해는 이번 노동자연대 배척에서 보듯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체성 정치는 사회의 근본 분단이 계급에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며 특정 차별을 겪는 사람들의 특수한 정체성에 호소해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성소수자 운동에서 정체성 정치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성소수자 차별의 경험

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차별에 맞서 잘 싸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런 정체성 정치는 한편에서는 노동자 계급에 기반을 둔 반자본주의적 좌파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소수자들이 계급을 뛰어넘어 모두 같은 이해관계를 지닌다는 생각을 고무해 개혁주의로 이어진다.

성소수자 운동을 주도하는 친중간계급적 자유주의자들은 체제의 권력자들 일부와 동맹을 맺는 전략을 취하면서 운동을 협소하고 온건한 방식으로 끌어간다. 그리하여 무지개행동 내에서 언제부터인가 친기업적 정서가 득세했고, 올해부터는 아예 무지개행동 차원에서 초거대자본인 구글의 돈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는 이와 함께 심지어 친제국주의적 정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 주류 내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서구 사회에 대한 환상이 널리 퍼져 있는 것과 관련 있는 듯하다. 서구와 달리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지원이 아예 없다시피한 한국의 상황에서 다국적기업과 서구 제국주의 국가기구들의 지원을 얻는 것을 한국에서의 변화를 위한 지렛대로 여기는 듯하다.

가령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는 서구사회와 달리 일 년에 시청 광장 하루 빌리는 것도 어려운 한국 성소수자들의 처지에서 ‘핑크 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는 듯하다.

한국 국가와 대기업들이 성소수자 운동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지배자들의 무시를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큰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제국주의와 다국적기업들에 기대어 메우려는 전략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

까? 그것은 체제의 더 큰 부분에 흡수되는 것이고, 더 큰 악에 눈 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처럼 미 제국주의가 한국 현대사를 유린하고 아직도 대다수 민중이 한국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사는 나라의 성소수자 운동이 미 제국주의의 지원을 등에 업고 활동하는 것은 나머지 대다수 민중운동과 정서적으로 이반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구에서 일부 자민통계 단체들과 좌파단체들을 끌어들이는 등 꼼수를 부려 봤자 소용없다. 그런 단체들의 기회주의만 노출될 따름이다.

한국 성소수자 운동 단체들의 친제국주의 경향은 매우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무지개행동 공식 SNS에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사회 위원장 마이클 커비를 “성소수자 출신 최고법원 법관”이라며 우호적으로 언급했고, 5월 29일 무지개행동의 일부 단체들은 마이클 커비와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지개행동이 마이클 커비를 성소수자라는 면에만 주목해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마이클 커비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자로,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발간해 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위선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를 뒷받침하는 구실을 했다.

이렇게 사회의 성격을 무시하며 성적 지향만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정체성 정치는 부지불식간에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을 가리는 구실을 하게 된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침략전쟁과 약소국 압박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소수자 친화적 연사를 사용하는 ‘핑크 워싱’은 급진적 성소수자 운동과 반자본주의운동에서 이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

▶ 7면으로 이어짐



친기업·친제국주의는 성소수자 해방에서 멀어지는 길 2017년 6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차려진 미국 대사관 부스



스톤월 항쟁 성소수자 권리 확대는 아래로부터 권력에 도전하는 집단적 저항을 통해 가능하다

은 자국에서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데도 ‘핑크 워싱’을 이용하고 있다.

무지개행동의 일부 주도자들은 이런 ‘핑크 워싱’의 문제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행동이 주최한 포럼에서 이스라엘의 ‘핑크 워싱’이 주제로 잡힌 적도 있다. 그러나 무지개행동을 지배하는 정체성 정치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미국의 여러 주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전반적으로 제국주의 문제에 무뎌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쿼어문화 축제조직위 등 일부 단체와 개인들은 노골적인 친제국주의적 성향까지 보이고 있다.

2014년 여러 성소수자단체 소속 활동가 8명이 미국 국무부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했고, 많은 단체들이 미국 대사관 등에 후원을 요청해 사업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미국 국무부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인 랜디 베리가 한국을 찾아 유명한 성소수자들과 주요 단체 활동가들을 오찬모임에 초청했고, 또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다고 표방해 온 행성인도 지난해부터 해외 대사관이나 기업의 돈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미국 대사관에 후원을 요청해 예산 지원을 받아 아시아 LGBT 부모모임 초청 포럼 등을 열었고, 올해는 구글의 돈도 받기 시작했다.

행성인의 전신인 동성애자인권연대는 2000년대에 일어난 국제적 반전·반자본주의 운동(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 뿐 아니라 WTO, IMF 등 제국주의적 국제기구 반대)과 한미

FTA 반대 운동 등에 단체 차원에서 지지를 제공했고 많은 회원들이 이런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한때 동성애자인권연대가 동성애자 운동의 급진파를 대표했다는 점에서 최근 행성인에서 나타나는 이런 우경화는 몹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핑크 머니

이런 우경적 행태가 아직 행성인의 활동 방향 전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듯하다. 또한 여전히 행성인 내에서는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적 성향의 청년들이 상당수 있다. 올해 행성인 내의 한 소그룹이 연 ‘핑크 워싱’과 ‘핑크 머니’에 관한 비판적 토론회에 30여 명이 참가했고 발표자는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이런 급진적인 청년들이 행성인과 성소수자 운동에 유입되는 ‘핑크 머니’에 경각심을 갖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성소수자 운동의 급진적인 전통을 부활시키기를 기대한다.

성소수자 운동 내 급진적인 사람들은 현재 무지개행동을 지배하는 우경적 노선(과 그 일환인 노동자연대 배척)을 심각한 문제로 여겨야 한다. 탈세로 악명 높은 다국적기업 구글의 돈을 거리낌 없이 받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무지개행동 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성소수자 운동이 체제에 순치돼 굶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4년 무렵부터 ‘구글세’ 도입이 국제적으로 논의돼 왔고, 최근 한국에서도 검토되는 판이다. 구글이 2014년 청소년성소수자워지기지원센터 명동 설립 비용 일부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구글세 도입

등 구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몰타기 하려는 것과 관계 있다. 따라서 무지개행동과 그 소속 단체들이 구글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구글의 뇌물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구글의 자금 지원은 성소수자 운동을 돕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운동을 더욱 썩게 만들 것이다. 대기업의 돈으로 편안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 기업이나 국제기구, 국가기관의 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미 5월 17일 무지개행동 주최 집회에서 사회자가 구글의 후원금을 자랑하면서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공언했다.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은 자본, 제국주의에 타협하면서 급진성과 투쟁성을 잃어가고 있다.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 이런 흐름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단체나 개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야 한다. 불가피하다면 소수일지라도 기존 연합체와 분리할 각오도 해야 한다. 그래야 진보적이고 건강한 운동을 새로 건설할 수 있다.

무지개행동의 우경화는 단지 성소수자 운동의 문제만은 아니다. 2000년대 국제적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에 한국의 많은 진보·좌파단체들이 동참해 왔다. 대기업과 동아시아 불안정 문제는 한국의 진보·좌파운동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따라서 무지개행동의 우경화에 진보·좌파단체들은 모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1 무지개행동은 구글에게 돈을 받기로 했으면서도 여전히 웹사이트에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각 단체와 개인의 부담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고 공자하고 있다.

정체성 정치가 아니라 진보·좌파 정치가 필요하다

모든 사회운동이 그렇듯이, 성소수자 운동 내에는 여러 이질적인 세력들이 있고 친자본주의적인 온건파는 초기부터 주요 세력이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등 계급을 가로질러 효과를 내서 차별 반대 운동은 친중간계급적 자유주의자들이 일정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사들은 흔히 노동자 계급 투쟁을 두려워하고, 자본주의 내에서 법률과 제도 개선에 주력하면서 지배계급 일부와 동맹을 맺는 전략을 추구한다.

현재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도 친중간계급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제국주의 국가기구와 다국적기업 등의 후원도 거리낌 없이 받는 등 매우 우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성향의 인사들이 성소수자 운동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성소수자 운동 내 급진파들이 우파 정부 9년 동안 단일정점 중심의 활동을 벌이면서 차츰 온건해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들 급진파도 정체성 정치를 대부분 수용해 성소수자 운동 내 보수적 경향과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투쟁별이기를 회피하다가 마침내 그 자신이 우경화하는 모습을 흔히 보여 왔다.

성소수자들은 다른 사회집단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리하여 성소수자들만이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 잘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은 성소수자 운동의 예외성을 강조해 성소수자 해방을 더 넓은 사회 변혁 운동과 분리시켜 왜소하게 만들고 해방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현재 성소수자 운동 주류의 이데올로기는 성소수자들의 차별 경험과 모호한 정체성 논의에 집중돼 있고, 자본주의, 제국주의, 계급의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분리시켜 다루면 성소수자 차별의 뿌리를 이해할 수 없고, 성소수자 해방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도 제시하지 못한다.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조약이나 해외 특사 등의 압력을 통해 군형법 92조의6 폐지나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개혁 요구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일각의 기대는 공상적이다. 역사적 경험을 보면 대중적 투쟁이 수반돼야 차별이 완화되고 실질적 개혁도 성취할 수 있다. UN 같은 국제기구가 한국 정부에 군형법 92조6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계속 무시해 왔다.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개혁을 성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체제 내 몇 가지 개혁을 성취하는 것에 시야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 가령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해야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에 거의 배타적인 강조점을 두고 이를 위해 심지어 권력자들과 동맹하는 일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 성소수자의 일부 상위 계층이 그런 개혁의 실질적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것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돼도 자본주의 생산과정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고 착취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노동력 재생산 단위로서 가족제도의 구실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구실을 한

다. 그래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서구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극소수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지 몰라도, 대다수 평범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천대받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이윤 논리로 인한 상품화가 거대하게 증가하면서 섹슈얼리티가 크게 왜곡되고 있다. 진정한 성 해방은 착취와 소외, 차별의 근원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제거할 때 가능하고, 성해방을 위한 투쟁은 이런 철저한 사회 변화의 전망을 지녀야 한다.

한편, 성소수자들은 해방을 위해 스스로 투쟁해야 하지만 다른 사회운동, 특히 노동자 계급 투쟁으로부터의 예외성을 강조해서는 해방이 가능하지 않다. 성소수자들이 지독한 천대와 차별을 겪는다고 해서 저절로 단결하지 않는다. 또, 차별을 받는다는 사실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하는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 분단은 성적 지향이 아니라 바로 계급에 있다. 즉, 자본주의 체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이고, 바로 그 때문에 노동자 계급에게 자본주의 사회에 도전할 잠재력이 있다.

물론 노동자들의 의식은 모두 혁명적이지 않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지닌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의식은 바뀔 수 있고, 노동자들은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는 데 객관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투쟁을 지지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 계급 운동에 기반을 둔 혁명적 좌파들이 이 과정을 촉진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다.

역사는 차별받는 사람들 대다수의 운명이 노동계급 해방의 전망과 떼려야 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노동자 계급 투쟁이 가장 멀리 나아갈 때 성해방의 전망도 활짝 열렸고,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패배했을 때 지배계급이 체제의 위기를 피억압자 집단들에 전가하고 온갖 이간질을 하며 억압과 통제를 강화했다. (성소수자 해방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책갈피, 2016)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따라서 성해방을 이루려면 차별받는 사람들이 지배계급 일부와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 및 다른 피차별 사회집단과 동맹을 맺고 자본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혁명 전 러시아에서는 동성애자운동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도 말이다. 바로 노동자 계급이 기존의 억압적 법률을 폐지하고 생산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해방의 전망이 활짝 열렸기에 성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급속도로 개방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실험이 중단되고 동성애가 다시 불법이 된 것은 러시아 혁명이 서방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포위에 의해 패배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성해방을 성취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 도전하는 급진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개혁을 위한 투쟁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반대와 결합시키는 진정으로 진보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무늬만 “정규직화”

신정환

문재인 정부가 7월 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가이드라인을, 8월에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앞두고 최근 <한겨레>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가이드라인의 기본 골자를 보도했다.

내용인즉,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부인 2020년까지 2단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로 올 하반기부터 일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도 했던 것인데, 현 정부는 몇몇 규정을 개선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넓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에게는 시중노동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로 2020년까지 용역·파견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한다. 그런데 말이 좋아 “정규직 전환”이지, 그 방식은 자회사 고용, 무기계약직화 등이 될 공산이 크다. 다만 이때까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편안을 마련하되,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그럴싸한 미사여구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화와 거리가 멀다. 고용은 보장하되, 처우 개선은 최소화하고 뒷전으로 미뤄 두는 게 주요 골자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저임금으로 계속



문재인 식 '정규직화'는 노동자들의 염원과 거리가 매우 멀다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연대>가 지적해 왔듯이,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은 고용 불안은 물론 임금·노동조건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수만 명이 하루 파업을 하고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교육공무직화) 등을 요구했던

것에서 보듯 말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데 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재원이 과도하게 늘어 자칫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방식은 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자·기업주들에게 부유세를 거둬들

이면 얼마든지 해결책은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의 이윤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엉뚱하게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동 책임’ 운운하며 양보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소 비용’과 ‘정규직화’는 모순

둘째, <한겨레>가 보도한 정부 방침을 보면, 무기계약직화 대상조차 제한적이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의 기간제 사용 예외 규정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비중이 큰”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수년간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현행 교원임용체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핑계일 뿐이다.

물론 최근 전교조 집행부가 “현행 교원임용체계를 무너뜨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교사 전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은 잘못이다. 이는 정부가 책임을 발뺌하고 악용하는 데 빌미를 주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약화시킨다.(관련 기사: ‘전교조 집행부의 비정규직 강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 반대는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친다’)

한편,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화 하는 것도 임기 후반부인 2020년까지로 늦추려 한다. 용역업

체들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이 이유인데, 업체들의 이윤은 고려하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긴급한 개선 열망에는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역대 정부들의 행태, 지금의 경기침체 상황 등을 볼 때,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꾀죄죄한 정책들조차 지키지 않을 수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처우 개선이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셋째, 정부가 내놓은 임금·처우 개선 방안은 추진 시기가 너무 늦을 뿐 아니라, 그 내용상 개선 효과도 매우 제한적인 공산이 크다.

정부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말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직제, 직무급제와 같은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 정부 인사는 그 목적이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이 곧바로 기존 정규직·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상향평준화 하자는 노동운동의 오랜 요구인데, 도리어 이것을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둔갑시켜 버린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매우 불충분하다. 노동운동은 그 약점을 폭로하고 노동자들의 열망을 성취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 건설에 강조점을 뒤야 한다.

정권 바뀌어도 철도 산재 사망 계속되다

6월 28일 0시 17분 노량진역에서 철도노조 영등포시설지부 전 지부장인 김창수 동지가 전동차에 부딪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철도에서 선로를 보수하는 일을 해 왔다. 선로 유지·보수는 탈선 같은 대형사고를 막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가 일한 노량진역 선로는 복잡하고 곡선이 심하다. 선로 간 거리는 규정보다 좁아특히 위험했다. 게다가 사고 당일엔 선로를 통제하지 않고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 작업을 해 훨씬 더 위험했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가 “모든 구간에

서 열차 운행 중 작업[상레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인력 감축

열차가 안 다니는 야간에 하는 것이 안전한데도, 철도공사는 선로 유지·보수 노동자들의 주간 근무를 늘려 왔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특히 철도공사는 정규직은 늘리지 않고 외주를 늘려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했다. 감사원 조사를 보면, 2013년 현재 철도 선로 유지·보수, 건축 분야 노

동자 21퍼센트가 외주업체 소속이다.

결국 더 많은 일을 더 적은 노동자들이 하게 됐다. 고(故) 김창수 동지가 하던 일도 2005년에는 13명이 했는데, 현재는 겨우 8명이 한다. 사고 당일에는 1명이 휴가를 냈지만, 인원이 총원되지 않아 7명이 일해야 했다.

게다가 노량진역에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 이동할 전용 통로가 따로 없어, 선로와 선로 사이를 걸어 다녀야 한다. 규정상 이 간격은 4미터 30센티미터여야 하지만, 사고 현장의 선로 간 간격은 4미터이다. 그러면 마땅히 열차 운행

시간이 지난 뒤 작업을 하게 해야 했다.

7월 3일 노량진역에서 철도노조가 긴급 집회를 열었는데, 철도 노동자 1백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광운대역 사고로 고(故) 조영량 동지를 보낸 지 한 달 만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으며 철도공사를 규탄했다.

고(故) 김창수 동지는 정년 퇴직을 1년 6개월 앞두고 있었다. 그는 24년간 철도 노동자로 일하면서 철도노조 시설국장을 지냈고, 지부장을 세 차례 했다. 특히 지난해 파업 때 영등포시설지부장으로 파업에 참여했다 해고됐

다. 그 뒤에도 시설 외주화 반대 분사 앞 농성에 참가했다. 그는 최근 복직했는데, 복직 한 달 만에 숨져 동료들은 더 안타까워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열차 운행 중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를 위해 노량진역사에서 농성하며 대시민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비극적 죽음을 막으려면, 인력 충원과 외주 업무 환원이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

신명희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5만 원, 2년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례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독기간 ☐ 1년 50,000원

☐ 2년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